

한주간 쉽게 보는

#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

Jeju News Keyword Trends

No. 32



# Contents

※ 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※ 대상 기간 : 2025.03.13~2025.03.19

##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- 정치·행정 ..... 1
- 경제·관광 ..... 2
- 지역·사회 ..... 2

## 1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-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..... 3
-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..... 7
-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..... 10

##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○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

분야	주요 키워드
정치·행정	탄핵(대통령, 선고), 들불축제(축제, 오름), 버스, 서비스, 디지털
경제·관광	관광객, 성장, 수출, 감률, 미래
지역·사회	외국인, 범죄(발견, 사건), 한라산, 차량, 필로폰

※ 분석 기간 : 25.03.13.~25.03.19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○ (정치·행정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정치·행정	탄핵(대통령, 선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헌재 선고 지연</li> <li>- 단식 농성 확산</li> <li>- 지역 정치 파장</li> </ul>
	들불축제(축제, 오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들불축제 개요</li> <li>- 강풍·취소 논란</li> <li>- 오름불놓기 조례</li> </ul>
	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버스 요금 인상</li> <li>- 준공영제 재정</li> <li>- 대중교통 개선책</li> </ul>
	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가치돌봄</li> <li>- 건강주치의 도입</li> <li>- 원스톱기업지원</li> </ul>
	디지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스탬프 투어 확산</li> <li>- 메타버스 활용</li> <li>- 디지털 행정 전환</li> </ul>

○ (경제·관광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경제·관광	관광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국인 방문 하락세</li> <li>- 외국인 객 증가 가능성</li> <li>- 봄철 여행 심리 위축</li> </ul>
	성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내선 공급 축소 영향</li> <li>- 농업 부문 스마트화 추세</li> <li>- 디지털 전환 가속화</li> </ul>
	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반도체 호조에 의한 급등</li> <li>- 농림수산물 다변화 전략</li> <li>- 신흥 수출품목 부상</li> </ul>
	감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공편·공급좌석 감소율</li> <li>- 부동산 거래감소 흐름</li> <li>- 관광지 매출 감소율</li> </ul>
	미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형 스마트농업 비전</li> <li>- 친환경·탄소중립 전환</li> <li>- 디지털 혁신 도시 청사진</li> </ul>

○ (지역·사회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지역·사회	외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사증 입국 논란</li> <li>- 자치경찰 대응 강화</li> <li>- 지역사회 적응 문제</li> </ul>
	범죄 (발견 사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법조업 어선 검거</li> <li>- 편의점 성폭행 사건</li> <li>- 다이버 표류 사고</li> </ul>
	한라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정상 재개방</li> <li>- 무리한 등반 사망</li> <li>- 탐방로 이탈 행위</li> </ul>
	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중 추돌사고</li> <li>- 무면허 뺑소니 적발</li> <li>- 렌터카 관광객 주의</li> </ul>
	필로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량 밀수 적발</li> <li>- 해외발 공급 경로</li> <li>- 중독·재범 우려</li> </ul>



		<p>정부와 지지자들은 법치 수호를 강조하면서 기각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추세임 갈등 우려 점증 추세</p> <p>- 단식 농성 확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위성곤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진행하며 대통령 파면을 호소. 국내외 언론과 시민사회가 이를 주목하며 민주주의 가치와 헌법 수호 여부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는 상황</li> <li>· 단식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강 악화 우려가 제기되나 단식 참여 의원들은 파면 선고까지 중단 불가를 표명. 지지자들은 연대 활동을 펼치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하고 여당과 대립이 더 심화</li> </ul> <p>- 지역 정치 파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지역 정치권에서도 탄핵 논란이 확산하며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가는 양상.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져 도내 주요 현안 논의와 협력의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</li> <li>· 탄핵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경제회복과 민생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 발생. 지역 민심도 찬반으로 갈려 정치적 안정과 조속한 결론 도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</li> </ul>
정치·행정	들불축제 (축제, 오름)	<p>- 들불축제 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 들불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 무렵 새별오름에서 불놓기 등 체험행사로 열리는 대표 축제. 문화와 민속이 결합된 행사로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자원</li> <li>· 축제장인 새별오름 일대가 산림 인접 지역이어서 각종 관련 법령과 안전 대책이 중요한 이슈.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 공동체 의식과 관광 경쟁력 향상에 기여</li> </ul> <p>- 강풍·취소 논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올해 들불축제는 기상 악화로 일부 행사가 취소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상황. 축제 주최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밝혔으나 예산낭비 등 비판 여론이 제기</li> <li>· 행사 중단으로 준비했던 프로그램이 무산되고, 지역 상인들도 판매 부진을 겪어 피해 발생. 도와 시는 향후 기상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대안과 예산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</li> </ul> <p>- 오름불놓기 조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들불축제의 상징이었던 오름불놓기 행사가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 등으로 중단된 상황. 주민청구 조례는 오름불놓기 재개 가능성을 열었으나 제주도</li> </ul>

정치·행정		<p>측은 위법성 우려로 재의 요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조례 재의 여부가 도의회 본회의 상정 지연으로 후속 결정이 미뤄지며 축제 운영 방향에 혼선 초래. 불놓기 행사의 전통과 안전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</li> </ul>
	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버스 요금 인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11년 만에 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현행 1,200원에서 1,400~1,700원 범위를 검토. 재정 부담 증가와 운송 업체 경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도민 경제적 부담도 우려되는 상황</li> <li>· 공청회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은 인상 이전에 서비스 품질 향상과 운행 효율화 방안이 필요. 요금 인상이 교통수요 분산에 역행할 수 있어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</li> </ul> </li> <li>- <b>준공영제 재정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. 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감차와 노선 개편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교통 편의 훼손 가능성도 존재</li> <li>·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투명한 원가 관리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간의 균형이 중요. 시민들은 심야 버스 확대 등 편의 개선을 우선 요구하며 행정 신뢰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</li> </ul> </li> <li>- <b>대중교통 개선책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버스중앙차로 확충과 신교통수단 도입 등을 검토하며 대중교통 경쟁력 강화를 모색. 버스 수송분담률 향상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통합 환승체계 구축 등 종합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</li> <li>· 관광객 급증 시기 교통 정체 해소와 농어촌 지역 접근성 보장을 위한 맞춤형 노선 개선 필요성 부각. 청소년, 장애인 등 교통약자 지원 확대 정책과 연계해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가 핵심과제로 부상</li> </ul> </li> </ul>
	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제주가치돌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가치돌봄서비스 신청자가 늘어나며 소득·연령 상관없이 일상생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. 올해부터 서비스 유형과 무상지원 기준이 확대돼 더 많은 도민에게 돌봄 혜택을 제공할 계획</li> <li>· 돌봄 종사자도 257명에서 350명으로 증원돼 일자리 창출 효과와 서비스 품질 향상이 기대.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제주형 돌봄 모델로 지역 공동체 강화에 기여</li> </ul> </li> <li>- <b>건강주치의 도입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만성질환자와 아동·노인을 대상으로 거주지 가까이에서 통합적</li> </ul> </li> </ul>

		<p>의료 서비스를 추진. 7월 시범사업 시행 전 공청회를 열어 건강위험평가 등 10대 핵심 서비스 운영안을 제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비 절감을 위해 주치의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의료혁신 목표로 설정. 동네의원 참여 확대와 수가 보상 체계 개선이 필수 과제로 안정적인 서비스 정착이 관건</li> </ul> <p><b>- 원스톱기업지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기업 애로 해소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원스톱기업지원협의체를 확대 운영. 공공기관·부서 간 협업으로 인허가, 금융, 행정 지원을 신속 처리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모</li> <li>· 18개 기업 애로 중 22건 해결 성과를 거두며 실질적 지원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. 전문가팀과 단계별 맞춤 지원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</li> </ul>
<p><b>디지털</b></p>		<p><b>- 스탬프 투어 확산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다크투어리즘 모바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관광 서비스를 도입. 방문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다양한 명소를 인증하며 제주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확대함</li> <li>· 스탬프 투어는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상권과 연계 효과를 기대하는 관광 모델임 관광객은 인증 후 기념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체류 시간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줌</li> </ul> <p><b>- 메타버스 활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77주년 4·3희생자 추념 기간 메타버스 온라인 추모관을 운영해 시공간 제약 없는 참여 가능. 도민과 방문객은 헌화, 분향, 방명록 작성 등 가상 환경에서 추모와 소통의 기회를 체험</li> <li>· 디지털 기술을 통해 과거사와 역사적 가치에 대한 홍보가 확대되며 미래 세대 참여도 상승. 기대 실제 현장 방문과 온라인 기념관을 병행해 다양성과 보편성을 함께 추구하는 사례로 주목</li> </ul> <p><b>- 디지털 행정 전환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행정 분야에서도 보증금킵·대중교통앱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해 편의성과 효율성 증가. 공공 배달앱 다국어 지원 추진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략이 논의</li> <li>· 재정 감소 상황 속에서도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확대해 행정 비용 절감과 혁신 성과를 기대. 민관 협력으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며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을 강화 목표</li> </ul>



경제·관광	성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국내선 공급 축소 영향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근 국내선 항공편 감편이 이어지며 제주 노선 성장 여력이 제한되는 동향. 공급좌석 감소로 운임 인상 압박이 커져 관광객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양상</li> <li>· 내국인 시장 위축에 따른 운항사 구조조정이 심화되며 신규 취항이나 노선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. 수요 회복이 지연되면 제주 지역 항공시장 성장을 둔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</li> </ul> </li> <li>- <b>농업 부문 스마트화 추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임대형 스마트팜이나 비축농지 활용 시설이 늘어나며 농산물 생산성과 품질 모두 성장 기반을 다지는 동향. 청년농업인 지원이 강화돼 농업 현장의 기술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현상</li> <li>· AI·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작물이 가능해 제주의 미래 농업 성정을 이끌 기반. 정책·공공기관 협력으로 청년 귀농 창업이 늘어날 전망이다 흐름</li> </ul> </li> <li>- <b>디지털 전환 가속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관광·농업·물류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와 AI 활용이 활발해지며 제주 산업 전반의 디지털 성정이 가파른 편임. 공공배달앱이나 다국어 안내 키오스크 등 스마트 서비스가 늘어나는 동향</li> <li>· 글로벌 IT 기업과 협업이 추진되면서 제주도가 인공지능 인프라 유치에 나서고 있어 미래 산업 확장이 기대되는 상황.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도 중요해지는 실정</li> </ul> </li> </ul>
	수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반도체 호조에 의한 급등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나며 도내 전체 수출액 증가를 견인하는 현상. 해외 시장 수요 반등과 홍콩 등 중개 무역지 활기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동향</li> <li>· 특히 모바일·사물인터넷 분야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홍콩 수출이 최고치에 이르러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국면. 제주 경제의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해 미래 수출 동력으로 부상하는 추세</li> </ul> </li> <li>- <b>농림수산물 다변화 전략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음료·과실류·채소류가 해외 판로를 확대하며 전년 대비 높은 증가율을 보이나, 수산물과 축산물은 부진한 상태. 돼지고기·넙치 등은 주요 수출 대상국 시장 여건 악화로 타격받는 양상</li> <li>· 신선 농산물을 비롯해 가공품까지 라인업을 확장하며 안정적 수출처 확보에 주력. 해외 소비 트렌드에 맞춘 신규 품목 발굴과 현지 마케팅 강화로 장기 성장 가능성 증가</li> </ul> </li> <li>- <b>신형 수출품목 부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의약품 수출이 최근 몇 달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주력 수출군으로 부상하는 추세. 항공기 부품이나 금속 스크랩 등도 중국 등으로의 신규 수출이 증가해 틈새시장을 확보하는 양상</li> <li>· 단일 품목 편중을 탈피하기 위해 다각화 전략이 추진되며 제조·가공업 분야의 유망 업체 발굴도 확대되는 동향.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·기술 투자로 제주 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 상승이 예상</li> </ul> </li> </ul>

<p>경제·관광</p>	<p>감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항공편·공급좌석 감소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국내선 운항 편수가 2년 새 약 9% 가까이 줄어들며 공급좌석도 10% 안팎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는 상황. 운항편 축소는 관광·물류 전반에 부담을 주며 여행객 선택지 축소로 이어지는 양상</li> <li>· 제주공항 전체 여객 수 역시 전년 동기 대비 하락세를 보여 감률이 두드러지는 추세. 국제선이 다소 늘었음에도 국내선 부진이 커서 총합적 여객 감축으로 연결되는 현상</li> </ul> </li> <li>- 부동산 거래감소 흐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주택매매와 전세 모두 하향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감률이 전국 대비 높게 나타나는 국면. 소비심리 위축이 지속돼 매물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, 전세 가격도 연쇄 하락하는 동향</li> <li>· 중산간 지역 단독주택 수요가 주춤해지며 매도자 우위 구조가 흔들리는 현상. 추가 금리 인상 우려와 경기 둔화로 매수세 살아나기 어려워 도내 주택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전망</li> </ul> </li> <li>- 관광지 매출 감소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입도 관광객 중 장기체류 비율 하락으로 교통·숙박업계와 관광지 매출의 감률이 큰 폭으로 집계되는 추세임 단가 높은 체험·레저 상품보다 짧은 코스 선호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줄어드는 현상임</li> <li>· 도내 외식·카페·기념품 업종도 내국인 소비 위축에 체감 매출이 하향곡선을 보이는 상황임 일부 업소는 외국인 대상 프로모션 확대를 시도하지만 전체적인 감소율 개선은 미지수임</li> </ul> </li> </ul>
	<p>미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형 스마트농업 비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초기 투자비 높은 스마트팜 시설을 공공이 조성하고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임대형 농업정책이 주목받는 추세. AI 환경제어와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으로 생산성 향상과 안정적 창업 기반이 마련되는 현상</li> <li>· 청년농 인큐베이팅 성공 사례가 늘면 제주 농업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상황. 제주형 스마트농업은 향후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미래 모델</li> </ul> </li> <li>- 친환경·탄소중립 전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하나 전기·수소 기반 차량과 건설기계가 보급 확대되는 방향.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동화 개조·무공해 건설기계 지원이 강화되는 동향</li> <li>·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협력해 친환경 설비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며 미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흐름. 도민 생활 현장에 탄소 저감 대책을 결합해 녹색 전환 속도를 높이는 추진이 시급한 상황</li> </ul> </li> <li>- 디지털 혁신 도시 청사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빅데이터·인공지능 기반의 첨단 산업 육성이 본격화되며 제주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끄는 시범 지역으로 부상. AI 기업 데이터센터 유치 등으로 지역 IT 생태계 활성화를 꾀하는 단계</li> <li>· 관광·물류·농업 등 전 분야에서 스마트 기술을 결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목표로 설정. 노·사·민·정이 협력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다각화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상</li> </ul> </li> </ul>



지역·사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지역사회 적응 문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외국인 근로자와 이주민 언어·문화 장벽으로 갈등 심화되고 지역사회 융합 곤란. 가중됨 심각한 상황됨 한국어 교육 지원과 문화 교류 행사 확대 미흡하여 소통 부족에 따른 문제 발생</li> <li>· 생활밀착형 지원책 마련해 지역 언어·문화 차이 줄이고, 이중언어 강좌·멘토링 체계 도입 검토. 공공기관 통역서비스 확대와 행사 통한 교류 활성화 추진하며 또 정주 환경 개선에도 집중</li> </ul> </li> </ul>
	<b>범죄 (발견 사건)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불법조업 어선 검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AIS 끈 상태로 조업하던 대형 쌍끌이 저인망 2척 해경 헬기에 포착돼 도주 시도하였으나 결국 적발. 조업구역 침범과 불법 어획 정황 드러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및 수사 진행</li> <li>· 위치발신장치 끈 채 싹쓸이 조업 시 긴급사고 구조 어렵고 어족자원 파괴 심각해 엄정 단속 요구. 제주해경이 헬기 영상자료 분석으로 해당 어선 특정했으며, 선장과 소유자 등 관계자 조사 확대</li> </ul> </li> <li>- <b>편의점 성폭행 사건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낮 편의점에서 여성 직원 성폭행 일어나 충격 가중되며 용의자 현장 도주 후 뒤늦게 검거된 사건. 피해자 신속 보호와 심리 지원 이루어졌고, 경찰은 피의자 신병 확보 후 구속수사 착수한 상황</li> <li>· 업무 중 혼잡 시간을 노린 범행으로 드러나 안전 불감증 우려 커지며 편의점 보안 강화 요청. 신분증 검사·CCTV 감시 강화 등 자구책 추진 중이며 업주와 근로자 대상 범죄 예방 교육도 필요</li> </ul> </li> <li>- <b>다이버 표류 사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상 레저활동 중 조류에 떠밀려 다이버 여러 명 표류하는 사고 발생하여 해경이 긴급 구조 실시. 미처 대비 못 한 보트 훔칠 파손도 겹쳐 대형 인명피해 우려됐으나 신속 구조로 무사히 수습</li> <li>· 재발 방지 위해 다이버 장비 사전점검 철저히 하고, 기상 악화 시 바다 입수 자제 지침 강조. 해경은 해상안전 특별경계기간 운영하며 조업 어선·레저객 대상 안전수칙 홍보와 단속 지속할 계획</li> </ul> </li> </ul>
	<b>한라산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정상 재개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폭설로 장기간 통제됐던 한라산 백록담 구간이 50일 만에 다시 열려 등반객들 발길 이어지는 상황. 성판악·관음사 탐방로 정상 출입 가능해졌으나 안전장비 필수 착용 강조되며 부분통제는 지속</li> <li>· 돈내코 코스는 급경사 빙판 위험 커서 계속 제한 중이며, 관리소가 지형 점검 후 추가 개방 검토. 탐방객들은 아이젠과 스패치 지참 권장되며 기상악화 시 신속 복귀하도록 지속 안내 진행</li> </ul> </li> <li>- <b>무리한 등반 사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연일 꽃샘추위 속 무리한 새벽 등반 시 심정지 발생 사례 이어져, 산행 안전 불감증 우려 높아지는 실정. 성판악 코스 5km 지점에서 60대 등반객 쓰러져 병원이송 후 사망해 날씨·체력 관리 필요성 부각</li> <li>· 한라산은 해발 높고 날씨 변화 심해 체온유지 대책과 충분한 휴식 필수이며 동절기 사고 빈발하는 상황. 관리소와 119구조대, 모노레일 협조체계 강화 중이나 헬기 운항 불가 시 구조에 난도 증가하며 주의 요함</li> </ul> </li> </ul>

지역·사회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탐방로 이탈 행위</li> <li>· 백록담 주변 생태 보호구역 무단 진입 사례 적발 늘어, 자연 훼손 우려와 안전사고 위험 동반. 허가 없이 탐방로 벗어나 인종샷 찍는 등 불법행위 지속되며 과태료 처분 사례도 꾸준히 발생</li> <li>· 관음사·성판악 코스 외길 구간서 이탈하면 추락 위험 크고 구조 어려워, 자제 안내 반복 필요. 국립공원관리소가 드론 감시와 CCTV 확충 예정이며, 적발 땀 강력 처분 방침으로 재발 방지 도모</li> </ul>
	차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중 추돌사고</li> <li>· 출근 시간대 제주시 노형 교차로에서 차량 5대 연쇄 충돌해 극심한 교통 정체와 일부 부상자 발생. 운전자 부주의와 급제동 실패가 겹쳐 사고 확산됐고, 트럭 운전자 포함 2명 병원 이송된 상황</li> <li>· 사고 처리 완료 후에도 도로 혼잡 이어져 출근길 불편 가중되며 경찰이 원인 규명 위해 조사 중. 시민 안전 위해 안전거리 확보와 신호 준수 강조되며 상습 정체구역 운행 시 주의 요구되는 실정</li> <li>- 무면허 뺑소니 적발</li> <li>· 중앙선 침범 역주행 중 사고 후 도주한 난민 출신 20대 무면허 운전자, 20분 만에 경찰에 검거. 사고 지점 약 1km 떨어진 곳서 배회하다 현행범 체포됐으며, 안전 불감증·무자격 운전 심각성 부각</li> <li>· 차량등록증 없이 난민 자격으로 입도한 사례라 체류 관리 허점 우려되며, 법무부 협조 필요. 경찰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 적용해 엄정 수사 중이며, 향후 유사 사안 단속 강화 예정</li> <li>- 렌터카 관광객 주의</li> <li>· 제주 방문 관광객 증가로 렌터카 이용 대폭 늘었으나, 초행길 급차선 변경·졸음운전 사고 빈발. 단기 체류 탓에 무리한 일정 소화하다 안전운전 소홀해 사고 많아 지역 교통 혼잡까지 초래</li> <li>· 공항 렌터카 업체와 도로 당국 협력해 위험 구간 표지 확충하고 안내 책자 제공 강화 필요. 해외 관광객 대상 다국어 교통안전 앱 개발 논의 중이며,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해 사고 예방 도모</li> </ul>
	필로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량 밀수 적발</li> <li>· 제주공항 통해 필로폰 7kg 이상 들여오려던 외국인 3명 검거돼, 국내 도매가 7억원 상당 규모 추정. 여행용 가방·신발 밑창 등 은닉 수법 동원했으나 세관 검사로 붙잡혀 특가법 위반 혐의 구속</li> <li>· 무사증 제도 악용한 조직적 범행 가능성 높아 검찰·세관·국정원 공조로 추가 공범 추적 중. 재판에 넘겨진 운반책들 엄벌 방침 속 도는 마약정정 지역 사수 위해 감시망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</li> <li>- 해외발 공급 경로</li> <li>· 동남아·중국 등 거점 통해 국내 대규모 필로폰 들어오는 사례 증가하며 국제 마약조직 연계 의심. 캄보디아발 항공편 활용해 제주 입도 시도한 정황 포착돼 국경관리 허점 지적되는 상황</li> <li>· 주요 입국 루트 별 밀반입 단속 강화되며 여행객 수하물·내피 은닉 등 기발한 수법도 속속 발견. 보안 검색기·탐지견 운영 늘리고 마약범죄 실무협의체 정례화해 예방·단속 동시 추진 계획</li> </ul>

		<p>- <b>중독·재범 우려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필로폰 등 투약자 재범률 높아 치료·재활 지원 시급하지만 제주 내 전문 센터 부족으로 한계 존재. 단속만으로는 완전 근절 어렵고 체계적 중독 관리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</li> <li>· 마약사범 초기 상담과 치료 연계하도록 지자체·의료기관 협력체계 강화해야 범죄 억제 효과 기대. 재범 예방 위해 보호관찰 확대, 재활교육 연계 등 다각도 접근 필요하며 교정시설 지원도 논의</li> </ul>
--	--	---

※ 본 발간물은 온라인 상의 자료를 재정리한 것으로서,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.